

# 금융타운 조성·전라감영 복원·지방의원 주민공천

(전희재 후보)

(김윤덕 후보)

(김광수 후보)

## Report 막오른 총선… 후보자들 공약 살펴보기-①전주 갑

4·13 제20대 총선의 본선전이 시작했다. ‘선거구 재획정’, ‘다협 구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 소개를 통해 정당한 ‘정책전’을 유도하고자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구도와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주 갑 선거구는 제19대 총선의 전주시 완산구 갑 선거구에서 덕진구 인후동이 추가로 합해진 선거구로 총 18만6,391명(2011년 2월28일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 후보자는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65),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49),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57), 무소속 유종근 후보(72) 등이다

여론조사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윤덕 후보의 우세를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지난 2015년12월28일 보도한 뉴스 전북취재본부에 따르면 전희재 후보 7.8%, 김윤덕 후보 30.2%, 김광수 후보 15.9%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8일 보도된 전북매일신문에 따르면 전희재 후보 7.8%, 김윤덕 후보 32.9%, 김광수 후보 35.0%를 보여 김광수 후보의 약우세를 내비쳤다. 또한 같은 날 보도된 JTBC, MBC, 전북도민일보에 따르면 전희재 후보 7.9%, 김윤덕 후보 41.9%, 김광수 후보 28.7%, 유종근 후보 5.5%를 보여 김윤덕 후보의 강세를 입증했다.

공약으로는 먼저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는 전주시의 핵심 시정과 관련된 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았다. 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전주권과 공동공약 적극 추진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통문화수도 조성 ▲지역경제활성화로 청년일자리 창출 주도 ▲수도권권 활성화 주도 ▲복지전주 조성 ▲활력이 넘치는 전주 조성 등이다

이 중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권 공동공약은 금융타운 조성 및 탄소산업중심도시 조성 등으로 전주 시정에 맞춰진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그는 후백제산성복원 및 관광벨트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전주교도소 공영화 및 완산동·노송동·서악동 등의 주거환경개선에 앞장 서겠다는 각오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더민주 김윤덕 후보는 5대 공약과 전주 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5대 공약으로 ▲전라감영 복원 본격 추진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균형발전 ▲재벌 개혁 단행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실현 등을 내세웠다. 또한 20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의 전주 발전 공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라감영 복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로써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는 타 후보에 비해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초연금 30만원



새누리 전희재 후보

전주권 공동공약 추진  
전통문화수도 조성  
청년일자리 창출 주도  
수도권권 활성화 추진



더민주 김윤덕 후보

전라감영 복원 본격화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수도권 규제 완화·재벌 개혁  
사람 중심 따뜻한 복지 실현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

지도층 사회적 책임 의무화  
지역 청년인재 채용 쿼터제  
소외계층 취업지원센터 도입  
지방의원 100% 주민공천



무소속 유종근 후보

전주 한옥마을 연계  
백제·조선 테마파크 유치  
구도심, 역사·문화  
금융 중심지로 개발

인상을 통해 노약자의 표심 잡기에 나서며 이번에 새로 포함된 인후 3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종호수 수변 생태공원 조성 등의 공약도 눈에 띈다.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13대 희망공약을 발표해 전주시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화 ▲전주의 '육·해·공 종합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지역청년 인재채용 쿼터제 도입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 ▲장애인·노인 취업지원센터 및 주차의 제도 도입 ▲역사유적 탐방로 조성 등을 통한 '체험형 관광' 네트워크 구성 ▲지방의원 100% 주민

공천제 ▲구도심 및 점동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육성 지원 구축 ▲사회공헌형 인재육성센터 등을 통한 사교육 경감 ▲통신비 인하를 통한 특별법 제정 ▲영·유아돌봄 공적책임제 도입 ▲이종호수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이다.  
김 후보의 13대 희망공약은 지역현안에 관련된 공약과 지방자치, 교육 공약 등으로 무게를 분산시킨 분위기다. 특히 최우선 공약을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화 법(노블리스 오블리주법) 추진으로 삼음으로써 지역현안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은 두 후보와 구별된다. 또한 그도 인후3동을

고려한 듯한 이종호수 생태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삼았다.  
무소속 유종근 후보도 25일 국제역사테마파크 유치와 구도심 개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연간 1,000만명이 찾아오는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 전주시 일원에 전주의 역사인 백제와 조선시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면서 "구도심을 역사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기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인후3동이 새롭게 선거구에 포함됨에 따라 이 지역 표심을 얼마나 얻는가도 변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국민의당 유성엽, 노인 폄하 발언 뱉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유성엽 후보(국민의당 정읍고창)의 노인 정치적 폄하 발언에 반박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유성엽 후보는 지난 25일 오후에 있었던 전북CBS 주최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정열 후보에게 “85살 먹고 출마했다. 너무 늦게 나온 것 아닌가? 50대나 60대 초반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후보의 나이를 문제 삼는 인신 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유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 강광 후보에게 “나이가 많아 기여력이 떨어졌다”는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당시 정읍시 노인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수많은 질타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국민의당 후보대표의 역할을 하며 총선 출마자로서 자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폄하와 함께 노인의 정치적 역할과 참여를 강요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제시하고 있는 노인대책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미성년자·공무원 등 제외의 누구든지 선거운동 가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13일동안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허가 폐지 이의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심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 관한 지급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인, 도로, 시장, 점포, 대화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할 수 없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 이용을 통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통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  
향우회, 친척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우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고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 야권 곳곳 후보별 단일화 움직임 ‘붐물’

## 안철수 대표 “후보연대 없이 정면 돌파” 반대외사 불구 국민의당 김성호·정호준 후보 등 더민주와 추진 움직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곳곳에서 지역구 후보별 단일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당이 당파의 사전 협의 없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후보에게는 강력조치를 취하겠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당 내부에서 단일화 요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 의원이 입당할 때 안 대표와 후보단일화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고, 지역에서 후보들간의 연대는 정 의원이 일어서 할 일”이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단일화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같은 라디오에서 “(단일화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뒤늦게 지역에 오자마자 단일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유권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 지 걱정이 많을 수 없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 안산지역의 부좌원 의원도 더민주 손창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다.  
강원 춘천에서는 이날 국민의당 이용범 후보와 더민주의 허영 후보가 경선을 통해 허 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김성호 후보는 29일 모 언론사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더민주 한정에 의원에게 후보단일화를 제안했고,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경선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하지만 자의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면 징계를 하겠다고 하니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각 후보들이 일어서 개발적으로 단일화해도 좋다는 공식지침이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검찰, 총선 후보 지지사무실 수색

검찰이 4·13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검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전북의 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사무실에서 도내 한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전화 홍보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은 사무실에 보관 중인 각종 서류를 확보했으며, A후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사할 방침으로 보인다. /법률주 기자

## 문재인 “야권연대, 선택이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9일 “야권연대를 무조건 해야 한다”며 “오늘이 지나고 내일도 성과없이 흘러간다면 야권 전체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리의 그릇에 민심을 담아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야권 전체 지지율은 새누리당보다 10% 이상 높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

이처럼 당 방침과는 별개로 각 지역구 단위에서는 이미 단일화가 추진됐거나 일부 지역은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당과 후보 간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절령 단일화를 통해 더민주 후보가 됐다고 해도 국민의당의 기존 지지자들이 더민주 후보를 찍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받고 후보연대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신부터 후보 간 연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못박음으로써 다른 후보들에게 선거 완주를 독려하고자 하는 신호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규 전라호남본부장은 계속되는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당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양자가 합법적으로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오늘 관훈토론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예로 들면서 연대없이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며 “그것이 전체 후보들에게 주는 시그널(신호)이라고 보면 된다”고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성주 기자

보다 10%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은 새누리당 심판이고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승리의 그릇에 민심을 담아야 한다. 선거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야권연대는 공약이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승리의 그릇”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도내 시민사회·중소상인단체 후보자 우선 정책입법과제 제안

전북 12개 시민사회와 중소기업단체는 제20대 총선에 나선 각 후보들에게 우선 정책입법과제 13개를 제안했다.  
이들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과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고 협의한 결과물이다. 이번 제안들이 지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 분별하고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과제는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3개 분야,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5대 분야, 사회 복지 5대 분야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당 등 복요건 완화, 정당명부 지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자치권 강화, 복합소상공인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이다. /특별취재반

## 더민주 도당, 내일 선대위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3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현장에서 413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필승결의대회 를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원기 상임고문을 비롯해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등 중앙당 인사와 김춘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총선후보자 및 선대위원,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해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할 예정이다.  
전북도당은 제1공약인 500조 금융도시 전라북도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현장을 출범식 장소를 선택했다.  
전북도당 선대위는 김원기 상임고문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최규성·김춘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이상작·박민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선후보자, 김규성 도당 고문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인선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3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선대위 아래 고문단과 대변인단을 두고 지역선거대책위원회를 뒀다.  
선거대책본부는 종합상황실 아래 운영지원본부, 전략본부, 조직본부, 홍보디자인본부, 법률지원본부, 메시지 본부 정책공약본부, 유세본부, 재보궐선거대책팀을 설치했다. 또한, 공명선거를 위해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 /특별취재반